

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

사회복지 부문 초청 토론회

노무현의

"참여 복지 비전 2007"

2002. 11.

새천년민주당

정책선거특별본부

"살기좋은 대한민국"을 만들기 위한

노무현의 "참여복지시대" 비전 2007

사회복지 정책의 3대 방향

- 분배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
- 저소득층 위주 복지에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
-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

참여복지시대 실현을 위한 4대 목표

-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참여복지국가 실현
- 국민의 평생 건강 보장
- 모든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의 행복한 삶 보장
-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 보장

※ 노무현의 '참여복지시대'란 ?

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, 나아가 가족, 사회, 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"더불어 사는 사회"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말합니다.

□ 참여 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

○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

- "국민복지실현 5개년 계획"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
-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현재10%에서 13.5%로 확대
- ※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 평균은 GDP의 22%(미국, 일본은 15% 수준)
정부(중앙 + 지방), 4대 사회보험, 퇴직금 등 민간 법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
- 정기적인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낭비요소 최소화
- 마을단위의 복지 공동체 형성
- 복지욕구조사에 따른 복지시설 균형 배치
- 자원봉사 적립제도(마일리지 시스템) 도입
-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- 사회복지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"찾아가는 서비스" 실현
-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와 근무여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
- 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노후 복지 실현
-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

○ 국민의 평생 건강 보장

- "건강수명"을 OECD 평균인 70세로 연장하기 위해 전국민 건강 보장 제도 실시
-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
- 임신부에 대한 산전·산후 관리 보장
- 40대 이상 고위험자의 만성질환 관리
- 위암, 간암, 자궁경부암, 유방암, 대장암, 폐암 등 6대 암 정기 검진 확대
- 노인의 치매, 중풍 및 중증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해 재활병원, 요양병원, 간호요양원(nursing home) 확대

○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의 행복한 삶 보장

-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종합대책 추진
 - 보람있는 일자리 50만개 창출
 - 치매·중풍 노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, 보호시설 대폭 확대
 - 노인 연금 확대(수급권자 10만원, 일반 노인 5만원)
-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
 - 중증 장애인의 인간적 삶을 위한 장애연금제도 도입
 -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, 저상버스 도입
 - 취업의지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
-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조화로운 사회 만들기
 - 보육료 절반 지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
 -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고용평등 여건 마련
 - 호주제 폐지와 행복한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
-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
 -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보호 및 상담 전문기관 확대
 - 입양문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“고아수출국” 불명예 해소
 -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축소

○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 보장

-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보완
 - 지역별,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
 -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, 의료 등 부분급여 실시
 -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
- 저소득 주민의 자활 사업 지원 확대
 - 자립준비적립금, 소득공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자활 기반 마련
 -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자활사업 확대
 -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스템 강화

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

○ “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”의 실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ی겠습니다.

- 각 분야별 사회복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5년동안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기본적 생활보장 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.
-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대비 10%에서 13.5%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※ OECD 국가 평균은 GDP대비 22%이고, 주요국별로 보면 스웨덴 34.1%, 프랑스 29.5%, 독일 29.2%, 영국 25.6%, 호주 18%, 일본 15.5%, 미국 15% 수준임(98년 통계)
- 각 지역별로 복지욕구조사에 기초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각 기관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화 하겠습니다.
-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,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에 따른 아동복지,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등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.
- 국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,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복지 국가 실현하겠습니다.
- 기부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- 자원봉사적립제(마일리지 시스템)를 도입하여 참여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.
- 정부나 시설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.

- 시·군·구청내 사회복지 전담부서(사회복지 사무소)를 확대 강화하여 일선 행정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- 저소득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현재 7,20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사회복지 직렬의 상한선을 4급까지 확대하고 일선 사회복지 정책입안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임기 내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, 근무여건과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- 사회복지관의 수익자 부담 20%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형식적인 법인부담금 제도를 없애고 정부에 의한 적정재원 조달을 책임지겠습니다.
-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‘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’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.

○ “공적연금 평가단”을 구성하여 기금고갈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국민연금의 가입율을 높여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화하며,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습니다.

- 기금고갈에 따른 국민부담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재정 추계 기능을 갖춘 “공적연금 평가단”을 구성하여 4대 공적 연금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 전환,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편입, 국세청과 연계하여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가입 확대 등으로 납부 예외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-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.

국민의 평생 건강 보장

-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“국민건강보장제도”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,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 지겠습니다.
-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,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,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.
 - 임신부에 대한 산전·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하여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여 40대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섭취와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위암, 간암, 자궁경부암, 유방암,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 검진과 의료 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치료지원을 하겠습니다.
 - 치매, 중풍,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요양병원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설치하고,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,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.
 - 6,000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으로 재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, 학교폭력, 성 문제와 임시스트레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.
 - 전 아동의 충치 예방사업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치·보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.
 - 전 국민 건강보장 제도를 실시하여, 질병으로 발생하는 37조원(1999년, GDP의 약 7.6%)의 비용 절감하고 ‘건강수명’을 현재의 평균 65.0세에서 OECD 평균인 70.2세로 연장하겠습니다.

○ **현재 10%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%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,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**

- 방문보건 간호사를 대폭 확대 배치하고 낙후된 보건소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적 공공보건기관으로 세워 국가 보건정책의 원활한 수행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.
- 도시지역에도 「지역보건센터」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거동불편 노인, 정신-신체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- 농촌지역의 읍·면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.
- 국립의료원,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민간병원 이상의 현대식 병원으로 개선하고,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운영으로 공공병원을 미국·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하며,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등의 비상시에 의료부문의 대처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-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,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기존의 각 부처,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공공병원, 보건지소 등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환자들이 중복진료 없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○ **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의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 부담율 재조정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.**

- ‘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’에 따라 본인부담금 제도를 재구성하여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 부담율을 낮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.
-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,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률제(진료비의 20%)가 아닌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, 총 금액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거나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누적적으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족의 치매, 중풍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, 요양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의 건강보장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.

-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을 위해 치매, 중풍 노인의 주. 단기 보호시설 및 치매 전문 요양병원, 간호요양원(nursing home)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※노인인구의 8.3%(29만명)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

- 치매 중풍 치료 주가보호시설 및 단기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가족 친화형 노인 복지시스템 정착
- 아침, 저녁으로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(30병상 이하의) 소규모 간호요양원(nursing home)과 주말에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 근교의 전원형 간호요양원 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 확보(장기적으로 30만 병상 확충)
-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전문 진료과목 개설.
- 중소병원의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자금 지원 및 입원수가 합리화. 국공립 병원에 노인 병상 확보 의무화.
- 노인병원 개설자에게 국민연금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진료 및 요양 시설 확충
-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, 6만 명의 간병요원이 중증 노인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 제공
-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한 가족파괴와 현대판 고려장 일소
- 틀니, 보청기 등 노인보호장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

화하여 건강검진 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.

- 보건소내 **치매상담센터**를 「**노인보건센터**」로 확대하여 보건소를 치매를 포함한 노인보건의료의 1차적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.
 -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, 이동목욕서비스,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
-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, 노인복지관 및 전국의 보건소에 노인건강 프로그램 보급 등 국가적인 “**건강 100세 프로그램**”을 운영하여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.
-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‘**노인요양 보험제도**’를 시범 실시하고, 결과여부에 따라 **공적인 노인요양 보호제도를 도입**하겠습니다.

※ **일본(개호보험), 독일(수발보험)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**

○ **수해,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.**

-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, 설치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
-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,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 시스템을 확충하고, 적십자의 혈액관리 체계와도 연계하겠습니다.
- 응급헬기를 활용하여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하고, 수지접합 전문병원, 장기이식 전문병원, 화상센터 등 전문진료기관에서 제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응급의료기금을 확충, 응급환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, 소아정신과 의사 및 사회복지사,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“**소아폭력센터**”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

상담과 치료, 가해자 재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○ **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**

- 민·관 합동의 「정부조직 진단위원회」를 설치·운영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위해 요소 중점관리(HACCP)제도를 확대 적용하며, 우선 도입 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. 모든 식품의 생산, 유통, 보관, 저장, 조리, 판매,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위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.
- 중앙과 지자체의 식품 단속 담당자의 권한을 강화하고, 거점신고 감시(Sentinel monitoring)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의 감시기능이 서로 교차하는 상호 감시하는 감독체계 구축하겠습니다.
- 해외의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현지에 “과건 검역관 제도”를 확대하여 수입 전 단계부터 위생을 관리하고, 통관, 검역 및 유통 담당자의 실명제로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.

노인이 존경받는 사회

○ ‘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’을 통해
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고,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
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- 정부예산 대비 0.37%에 불과한 노인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1% 이상 확충(2002년 기준 3,890억원 --> 1조 2천억)하는 등 노인복지와 각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비를 임기 내에 GDP의 13.5% 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- 고령화사회 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「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여러 부서에 나누어진 노인관련 업무의 조정과 책임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.
- 「고령사회대책기본법」, 「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보건법」,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 등을 제·개정하여 노인관련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
- 국책연구기관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)에 장기적인 노인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“노년복지정책연구실”을 신설하고, 전국적인 지부를 가진 “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” 등에도 노인 복지 관련 국가정책의 일부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-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이고, 노동부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며, 확대되는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내 노인관련과를 노인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.

○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생활을 위해 노인의 사회적
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,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을 만들어 고
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.

- 실버택배, 숲안내인, 산모도우미, 문화안내인,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

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대상 사업 (예)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• 노인창업부문 | • 노인복지간병부문 |
| • 노인돌보기 부문 | • 숲 안내인 부문 |
| • 문화 안내인 부문 | • 노인재활용사업부문 |
| • 노인 장묘관련부문 | • 노인 실버택배부문 |
| • 노인 호스피스부문 | • 노인 수출도우미 |
| • 노인 산불감시원 | • 기 타 |

- 노인인력뱅크와 기타 취업알선 기관을 연계 통합하는 “고령자 인력관리 공단”을 설립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.(2000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15.5%, 713만명에 이름)
 -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, ‘임금피크제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.
 - 고령자의 기준 고용율을 3%에서 6%로 상향조정하고,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고령자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.
 - 지역사회 시니어클럽(CSC)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 스스로 보람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노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.
 - 고령자 창업지원기금을 확보하고, 창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, 경로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겠습니다.
- 국민연금이 1차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

니다.

- 연금 수급자,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전 노인이 경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. (수급권자 월 10만원, 일반 노인 월 5만원 이상)

○노후의 주거 문화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, 노인정을 노인복지센터화 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사회적응 교육, 직업능력 교육, 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.
- 평생교육센터, 문화센터, 학원 등에 노인 교육비 할인(무료) 추진
- 노인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
- 노인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
- 극장 등 무료입장을 포함해서 노인의 국공립 공연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리고, 영화관 관람료 할인을 유도하여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- 노인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·보상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-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의 ‘노인복지센터’로 발전시키겠습니다.
- “노인 부양 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,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”하여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,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 실버타운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.
- 노인복지 용품 연구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회

○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거나,

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-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.
-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.
- 장애인의 이동, 교육, 취업 등 각 분야별로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○ 장애 수당 등을 장애연금으로 통합하고

장애 예방과 장애인 주택을 우선 보급하겠습니다.

- 장애수당, 아동부양 수당, 보호수당을 통합하여 장애연금으로 변경하고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연금 수준은 장애인 추가 소요비용(평균 15만원)에 준하고, 장애 등급과 유형 그리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- 국민임대 주택의 5%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하겠습니다.
- 장애인 거주주택의 개조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임산부의 장애아 검진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

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

-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, 「장애인등의편의증진

법」을 개정하여,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.

- 신설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설된 지하철의 경우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.
-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.
- 장애인 콜 택시,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.
- 저소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취업의지가 있는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

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여

소득창출과 삶의 보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%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
-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,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텔레마케팅(시각장애) 중소기업 조립작업(지체장애) 가정경리(뇌병변장애)
컴퓨터,정보처리(지체,언어,청각장애) 서비스분야(정신지체) 사무직(신장장애, 심장장애)
- 장애인 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.
- 장애인 의무고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창업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.

○ **장애인의 교육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
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**

-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에 관한 장애범주 및 기준을 재조정하겠습니다.
-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겠습니다.
- 특수학교와 학급에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 하겠습니다.
-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.
- 장애인의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제에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성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.
- 시각,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「편의증진법」을 개정하고, 점자·음성 안내, 캡션방송, 수화통역사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.

○ **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인 복지관,
보호 및 치료센터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**

- 질 높은 장애아동 치료 및 보호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공 병원과 보건소 등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보장구를 구비하여 장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 가정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.
-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긴급 주거 보호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.
- 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관, 주·단기 보호센터, 장애인 체육관, 재활병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.
-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율이 20~30%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.

여성이 행복한 사회

○ **평균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,
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**

- 보육료의 평균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.(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)
- 국가의 보육재정 부담율을 36%에서 50%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.
- 보육료 소득공제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.
- 장애아 보육과 영아보육 등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..
- 방과후의 열쇠아동이 없도록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.
- 야간보육, 24시간 보육, 휴일 보육, 시간제 보육, 공동육아제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,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-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.
-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- 육아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.

○ **여성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, 여성인적자원개발, 고용평등을 이루겠습니다.**

-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IT분야, 여성전문직 분야, 창업분야,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습니다.
- 남녀차별신고센터를 16개 시도로 확대하고, 조사관을 확충하고,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창구 설치, 여성채용박람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확충과 운영지원을 강화하며,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,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우선 구매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.
-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노동관련법, 4대보험법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하겠습니다.

○ **호주제 폐지,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·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습니다.**

-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겠습니다.
-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,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과 빈곤화를 막기 위한 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- 장애, 질환, 알콜중독의 특수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치료, 상담, 보호등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가출청소년을 위한 현장상담과 보호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.
- 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청소년이 활기찬 사회

○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,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“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”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, 체육, 봉사,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- 청소년의 참정권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겠습니다.
-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.

○ 탈학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령기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겠습니다.

- 청소년상담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“사회사업제도”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중퇴를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
-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지원 육성하여,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- 가출청소년에게 상담, 숙식, 심리치료,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, 심야노동, 기타 부당한 노동행위를 감시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거운 사회

○ 아동 학대 방지,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
-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하고,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하겠습니다.
- 학교 주변(school zone) 속도제한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.
-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아를 조기에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장애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- 협의이혼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, 저소득 한부모 가정,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차별없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바꾸고, 요보호 아동 보호 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.

-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,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여 “고아 수출국” 이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.
-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.
-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화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.
-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.
-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고아아닌 요보호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 보장

○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
서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.

-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을 지역별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), 가구별(노인, 장애인, 학생 등)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, 실제 수급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※ 현행 기준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부(36세, 33세)와 7세와 5세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임
- 조부모와 손자녀, 형제, 시부모와 며느리 등과 같이 부양을 하기 어렵거나, 가족관계 단절로 실질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.
- 차상위 계층(최저생계비 100~120%)에 대해 부분 급여(의료, 교육)를 시행하여 수급권자로의 탈락을 막고 자활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
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고,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, 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소득공제제도,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.